

# 미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넘어 무효”

“비상경제권한법, 무제한 권한 아냐”  
진행중인 관세협상 차질 예상  
트럼프 행정부 곧바로 항소 방침  
결국 연방대법원서 결론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 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측이 즉각 항소방침을 내비치며 법률 다툼을 예고함에 따라 결국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결론이 나는 게 아니겠느냐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

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 따르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 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으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오리건주 등 12개 주도 지난 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포괄적인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부과 차트를 들고 설명하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연합뉴스

란이 제기돼왔다.

이날 법원 결정은 재판부가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생략(summary judgment)한 채로 내려졌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해 글로벌 경기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국제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가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 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도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 동일 남성 기증 정자로 출생 67명 중 10명 ‘암’

암 위험 높이는 돌연변이 보유

유럽에서 동일한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태어난 아이 67명 가운데 10명이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남성은 본인이 희귀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사실을 모든 채 정자를 기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루앙대학병원의 생물학자 에드비주 카스페르는 지난 24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유럽인 간유전학회에서 이같은 사례를 발표했다.

기증자는 암 억제 유전자인 TP53에 돌연변이가 있는 남성이었다.

TP53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은 다양한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라-프라우메니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유전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

2008~2015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사는 46가족이 이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최소 67명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가운데 10명은 뇌종양이나 호지킨림프종 등의 암 진단을 받았다.

13명은 돌연변이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암이 발병하지는 않은 상태다.

카스페르는 이들은 암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자녀에게 암을 물려줄 확률은 50%라고 설명했다.

덴마크에 있는 ‘유립정자은행’에서 기증이 이뤄질 당시에는 TP53 변이와 암 관련성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였고, 기증자 본인도 건강한 상태였다.

정자은행 측은 기증자가 유전병 보인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2만개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유전자 검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로 동일 기증자에 의한 출산 횟수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사흘 만에 에베레스트 등정 ‘제논가스 흡입’ 논란

네팔, 초고속 등반 영국인 4명 조사

영국 등반가 4명이 제논(Xenon) 가스를 흡입하고 에베레스트 등정을 사흘 만에 끝내자 약물 사용의 적절성과 등반 윤리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 전직 특수부대원 4명은 에베레스트 등반가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거치는 고산 적응 과정 없이 지난 24일 산 정상에 올랐다. 등반을 시작한 지 사흘만의 일이었다.

에베레스트 등반에는 보통 몇주가 걸리는데 이들은 그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버린 것이다.

이들은 고산병을 피하기 위해 남들처럼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일대에서 저산소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대신 등반 2주 전 독일에서 제논가스를 흡입했다.

무취의 가스인 제논은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

혈류의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년 전부터 이를 에베레스트 등반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다만, 학계에서는 제논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자가 투약 또는 과다 복용 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상태다.

국제등반산악연맹도 지난 1월 제논 흡입이 등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부적절한 사용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논을 사용한 초고속 에베레스트 등반은 산악인 내부 논란에 불을 피우고 네팔 정부의 심기도 건드린 상태다.

히말 가우탐 네팔 관광청장은 “제논을 사용하는 것은 등반 윤리에 어긋난다”면서 이는 등반가의 체류 시간을 줄여 셰르파(등반 안내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네팔 관광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네팔 정부는 영국 등반가들의 제논 사용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연합뉴스

## 머스크, 미 행정부 떠난다…“특별공무원 임기 끝나”

감세법안 공개 비판 뒤 엑스에 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활동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업무를 완전히 끝내게 됐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별공무원으로서 내 임기가 끝난다”면서 “낭비적인 지출을 줄일 기회를 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DOGE 임무는 정부를 관통하는 생활 방식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이 게시된 뒤 AP통신은 백악관 내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를 완전히 떠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내 고위급에서 머스크의 임기 종료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머스크의 정부 활동 공식 종료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명명한 감세법안을 머스크가 방송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

머스크는 전날 밤 공개된 CBS 방송의 ‘선데



트럼프 정부 업무를 완전히 끝내고 떠나는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연합뉴스

이 모닝’ 인터뷰에서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에 대해 “재정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보게 되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연방 지출 감축을 위해 노력해온 DOGE 팀의 일을 망치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순 있지만, 둘 다

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막대한 돈을 쓰며 재집권 ‘일등 공신’으로 떠오른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약 100일간 DOGE를 이끌며 연방 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주도한 뒤 지난달 하순 백악관에서 나왔다.

연합뉴스

## 미, 중 유학생 비자 취소…공산당 연루·안보 심사 강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외국인 학생 비자 면접 중단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이민 단속 강화, 미·중 무역 협상 상황이 두루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한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향후 국무부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공산당’과 ‘중요한 분야’가 언급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여타의 중국 관련 조치와 더불어 안보 수호, 기술 경쟁의 성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유학생들이 핵심기술 분야에 진입해 첨단기술을 탈취해간다는 인식 하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다.

중국은 인도에 이어 미국 유학생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로, 비자 취소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경우 미 대학가와 유학생 사회에 폭탄급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EE)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은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2019년 37만여명에서 2024년 27만7천여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지만 여전히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미국 대학들은 등록금을 ‘전액’ 내는 유학생에게 재정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 유학생들이 등록을 취소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등 명문대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기 때문에, 미 대학들의 주요 수입원을 타격할 수 있는 이번 조치도 ‘대학 전쟁’의 일환일 수도 있다.

연합뉴스